

수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신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서희원·조성훈간사 / 02-3673-2141)
일자	2018. 04. 05.(목)
제목	[보도요청]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총17매)

##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4월 5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요 내용 : 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 발표  
2. 각 정당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제시  
3. 지방선거 ‘개혁과제’ 제시  
4. 전국 지방선거 ‘공약검증단 및 주요활동’ 발표 등

1. 경실련은 4월 5(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 발표,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제시, △개혁과제 발표, △공약검증단 및 경실련의 주요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정책위원장, 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지방자치위원장, 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집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6·13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3. 특히 6·13지방선거가 7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개헌, 남북·북미정상회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대형 이슈에 밀려 지역발전·주민복리를 위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이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재정립하기 위한 ‘경실련 개혁과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 전과기록 분석’과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소순창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손희준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공약검증단장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최운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식순

○ 개 회(참석자 소개)

○ 인 사 말

○ 경과보고

○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구성 및 활동계획 발표

○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 및 공천배제기준 발표

○ 6·13지방선거 개혁과제 발표

○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기자회견문)

○ 질의 및 응답

○ 폐회

## □ 경과보고

- 2017년 7월 5일(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전문가와 지역경실련이 함께 자치분권의 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칼럼으로 발표해 지방자치를 다시 생각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017년 10월 17일(화) 첫 번째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 발표를 시작하여 현재 20회차 칼럼 발표에 이룸.
- 2018년 2월 8일(목) 경실련 정책위원회에서 개헌, 남북관계 등 중앙의 대형 이슈에 지방 이슈가 실종될 우려가 큰 상황으로, 진정한 주민대표와 지역일꾼을 뽑기 위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경실련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가칭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음.
- 2월 23일(금), 대구에서 전국 경실련이 참여해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6·13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활동계획(안)을 보고하고, 이어서 개최된 분임토의에서 6·13지방선거의 과제와 활동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거쳐서 활동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했음.
- 3월 8일(목),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에서 6·13지방선거 정책기조를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로 확정하고, 세부 정책과제로 중앙정치화 차단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공명선거, 일자리·주거안정 등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위한 민생우선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활동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침.
- 3월 28일(수) [6·13 지방선거 공동대응]를 위해 전국경실련 공약검증단 구성 및 공천배제기준 논의를 진행함. 아울러 각 지역별 선거관련 지역현황에 대한 정보교류와 전국적인 공동대응과 지역경실련의 개별 활동을 위한 과제와 활동기조에 대한 의견을 모음.

## [자료 1]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활동계획(안)

### I. 운동 기조 :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 지방의 선거 : 중앙정치화 차단 및 자치분권 실현
- 공명 선거 : 공정하고 깨끗 선거 유도
- 민생 우선 : 일자리, 주거안정 등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정책 유도

### II.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조직 구성

#### ○ 본부장 : 정책위원장(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 운영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정부개혁위원장(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재정세제위원장(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노동위원장(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재벌개혁위원장(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위원장(이상은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서민주거안정위원장(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소비자정의센터(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조직위원장(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최운정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 ○ 정책공약검증단(단장: 지방자치위원장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 ○ 분야별 검증단

- 정치·행정·주민참여 : 정치개혁위원회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정부개혁위원회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지방자치위원회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 재정·예산 : 재정세제위원회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예산감시위원회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 지역경제·일자리 : 노동위원회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중소기업위원회 박근호 강남대 국제통상학과  
재벌개혁위원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 도시계획·지역개발 : 안전감시위원장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대표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토지주택위원회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도시개혁센터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 복지·교육 : 사회복지위원회 이상은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위원회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육위원회 나병현 前숙명여대
- 지역별 검증단(17개 광역 시도 / 지역경실련협의회)
  - 부산/울산 :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동아대 교수  
박승제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 한국유통과학연구소장  
도한영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사무국장  
김창선 경실련 조직위원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인천 : 이종일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한국뉴욕주립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현 인천경실련 보건복지위원장,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 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성아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 대구/경북 : 공재식 대구경실련 정책위원, 대구대 교수  
최준호 대구경실련 정책위원, 영남대 교수  
박영식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 대구대 교수  
김종웅 대구경실련 정책위원, 대구한의대 교수  
심준섭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경운대 교수  
이진희 대구경실련 정책위원, 영남대 교수  
전영권 대구경실련 정책위원, 대구가톨릭대 교수  
최동학 대구경실련 정책위원, 수의사  
엄봉훈 대구경실련 정책위원, 대구가톨릭대 교수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대전/세종 :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임상일 대전대학교 교수  
조현숙 대전대학교 교수  
이현국 대전대학교 교수  
신희권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충남대 교수  
강신성 한남대학교 교수  
김종하 목원대학교 교수  
정재호 목원대학교 교수  
김형철 전 가천대 도시공학과 교수
  - 광주 : 백 석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세무사  
심재훈 광주경실련 법률지원위원장, 변호사

-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 건축사  
 서상기 광주경실련 방송통신특별위원장, 사업가  
 이민원 광주대 교수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경기 : 김상연 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정용기 안산경실련 정책위원장,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송창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김경수 양평경실련 노동위원장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  
 주상운 이천여주경실련 사무국장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 강원 : 이택수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변호사  
 윤재선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심헌섭 강릉경실련 사무처장  
 김경석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 충남 : 노순식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호서대·고려대 외래교수  
 이상호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강동대 교수  
 김효실 천안아산경실련 정책위원장, 순천향대·백석문화대 외래교수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이수희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
  - 충북 : 윤병선 청주경실련 정책위원,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김영배 청주경실련 정책위원, 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청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최윤정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 경남 : 이 헌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거제대 교수  
 이광재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  
 권순식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창원대 경영학과  
 배동주 거제경실련 부장
  - 전남 : 송영종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경영학 박사  
 박승옥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변호사  
 하상복 목포경실련 정책위원장, 목포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  
 김성춘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건축사

- 박철우 순천경실련 집행위원장, 순천대 회계학과 교수
- 전북 :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최정일 전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최수진 전주경실련 사무국장  
김은정 정읍경실련 사무국장
  - 제주 : 문건식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변호사  
조시중 제주경실련 감사,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정책실장  
강영준 제주경실련 집행위원,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 Ⅲ. 활동 프로그램

분류	주요 프로그램	세부내용
정책 검증	①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 및 분권전문가와 지역경실련이 함께 자치분권의 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칼럼으로 발표</li> </ul>
	② 6·13지방선거 경실련 개혁과제 발표(역매니페스토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정책 및 지역별 정책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li> <li>■ 내용 : - 자치와 분권 -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 지방소멸을 탈피할 지역맞춤형 복지강화 -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강화 - 지역문화와 어메니티</li> </ul>
	③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약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약검증단 구성 : 중앙·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li> <li>■ 검증 분야 : 광역단체장 후보별 3대 핵심공약과 4대 분야별(정치·행정, 지역경제, 사회복지, 주거·도시) 공약</li> <li>■ 언론사와 공동 평가</li> </ul>
	④ 좋은 공약 및 나쁜 공약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에 부합하지 않는 공약,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무분별한 개발공약 등 선별</li> </ul>
	⑤ 각 정당 및 후보자 초청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정당 정책 평가 및 후보자 공약(정책) 검증</li> <li>■ 분야별 전문패널 구성</li> </ul>
유권자 운동	① 각 정당 공천 및 경선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후보자 및 공천확정자 전과기록 분석</li> <li>■ 공천배제기준 제시</li> <li>■ 각 정당 공천실태 모니터링 및 문제점 발표</li> <li>■ 공천비리 선거부정 감시활동(선거부정 고발센터)</li> </ul>
	② 풀뿌리 북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책 출간) 활용한 지방자치교육</li> <li>■ 지역 의제 선포식 등</li> </ul>
투표 참여	① 후보선택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적으로 나와 맞는 후보를 골라주는 프로그램</li> <li>■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운용</li> </ul>
	② 투표참여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선거·공명선거 유도 및 투표참여(사전/본) 독려</li> <li>■ 경실련 개혁과제, 공약평가 알리기</li> <li>■ 전국경실련 공동 투표참여 거리 캠페인 전개</li> </ul>

## [자료 2] 6 · 13지방선거 경실련 개혁과제

### ■ 5대 분야 24개 핵심 정책과제 - 세부내용 별첨

#### I. 자치와 분권

##### ■ 중앙에 대한 요구

- (1) 분권적 헌정구조로의 전환 : 지방의 정책 입법권 강화, 재정분권(재정 권한의 이양과 확대) 등
- (2)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 지방 4대 협의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법률에 근거한 공식기관으로 정례화.
- (3) 실질적 재정분권 :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체적인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반대, 기능 및 사무재배분, 세제개편, ‘PAYGO (Pay-as-you-go) 준칙’ 이행 강제
- (4) 위임사무 폐지 : 지방자치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 국가(중앙)의 지방에 대한 관여 최소화 및 초광역연합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파세자주권 보장
- (5) 주민자치 실질화 : 주민자치기본법 및 자치특별법 제정,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2층제의 주민자치계층 도입
- (6) 교육자치 확대 : ‘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시
- (7) 자치경찰제 단계적 실시 : 단계적 실시 및 협력적 체제의 강구, 광역-기초 통합운영모델의 도입, 경찰기능의 기능 재배분 방안 마련

##### ■ 지역에 대한 요구

- (8) 정책실명제 등 정책평가의 내실화 : 조례 및 규칙 제정, 주민의견 정책반영, 정책평가제 의무화, 정책이력제 실시, 위원회의 주민참여, 회의 공개 원칙, 시정정책토론청구
- (9) 독립적인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독립된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민감사위원회의 감사권한 및 참여 범위 확대
- (10) 상시갈등조정기구 구축(공공갈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상시 갈등조정기구, 참여의 활성화, 주민 정책제안제



## II.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 (11)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대책 강화,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일자리 창출 유망 업종과 지역특화산업 선정 연계,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 설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안정 및 실업대책 강화, 재벌과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 규제,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 조례 제정, 지역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 및 기능훈련학교』 설립, 적정임금 법제화, 공공공사 ‘직접 시공제’ 단계별 의무화, 공공공사 체불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12)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 밀착형 기업 집중 육성, 사회적 경제 지역협의체 구성, 사회적 경제 진흥기금 조성, 아동,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예산 강화
- (13)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개혁 :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제 도입, 구분회계 시스템 구축, 사업승인 주민투표제도 도입

## III. 인구절벽을 탈피할 지역맞춤형 복지대책

- (14) 공공 산후조리원 및 보육시설(어린이집) 확충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별로 일정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역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30%까지 확충,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부모와 교사 등 보육 참여자 참여확대
- (15)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 공공 운영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30% 수준 까지 확대
- (16) 비급여 없는 공공의료 : 「(가)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비급여 폐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운영

## IV. 도시계획의 투명성 및 주민참여 강화

- (17) 지역 공익시설 및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 :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처벌 강화
- (18)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 이행 : 모든 공공아파트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 80% 완공 후 분양

- (19) **젠트리피케이션(등지 내몰림)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강화** : 도시계획사업의 계획 수립 시 예방대책 수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도시재생사업에 공공매입과 이익공유형 방안 적용, 주민참여 지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립과 중간지원조직 마련, 주민참여 비율을 30%까지 확대
- (20) **부동산 과세기준 정상화 및 공공주택 확충** : 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 및 결정권한 광역단체장으로 이양, 과표산정의 투명성 강화,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및 공영개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인력지원 확대
- (21)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위원회 운영의 투명화 및 지자체 공공사업 정보의 투명성 확보** :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명단공개, 회의자료 및 회의내용 공개, 지자체 발주 공공공사의 원하도급 내역 및 설계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 민자유치 사업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정보 상시공개

## V. 지역문화와 어메니티

- (22) **맑은 물과 대기 질 보장** : 대기 질 측정 및 예보, 대기 질 분석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 질소산화물배출·미세먼지발생 억제 시책 추진, 비점오염원 배출업소의 단속과 정화조 등 개별 건축물 등의 지도 점검 강화,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체계의 도입과 요금현실화.
- (23)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창조 및 지역성 확보** : 문화정책 및 예산권한 지자체 대폭 이양, 문화예산 배분체계 변경, 지역문화단체 및 문화 인력 지원
- (24)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공공도서관·공공스포츠센터·마을카페 중심의 공공 인프라 조성, 도시지역 아파트단지별로 커뮤니티센터 구축, 농촌지역 리(里)단위 별로 마을공민회관 구축.

## [자료 3]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 및 공천배제기준

### I. 예비후보자 전과 기록 분석 자료 - 세부내용 별첨

####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40%가 전과경력자”

- 주요정당 40% 내외 전과경력자, 유권자 기대 걸 맞는 공천해야
- 예비후보등록자 40% 전과경력자(총 6,581명 중 2,633명)
-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기록 28.7%로 최다
- 강원도 전과기록 보유자 48.8%로 최다, 대구광역시 29.0%로 최소
-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전과기록 15건으로 최다

1. 경실련은 4월 1일(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대 지방선거(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분석했다.
2. <17개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은 총 73명이다. <226개 구·시·군의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자는 1,068명, <737개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자는 1,603명, <1,035개 선거구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3,837명으로 4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총 6,581명에 이른다.
  -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 33명, 구·시·군의장 선거 예비후보 572명, 시·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851명,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1,602명 등 총 3,058명으로 전체 46.46%를 차지했다.
  - <자유한국당>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 17명, 구·시·군의장 선거 예비후보 298명, 시·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501명,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1,220명 등 총 2,036명으로 전체 30.93%로 뒤를 이었다.
  - <바른미래당>은 예비후보자가 총 523명(7.94%), 민주평화당은 총 178명(2.70%), 정의당은 총 121명(1.83%)이다.
3.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중 전과경력자는 40%에 이른다. 시도지사 선거의 전과경력자는 38.4%, 구·시·군의장 선거는 40.1%, 시·도의회 의원선거는 39.7%,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는 40.2%로 나타났다.

- <지역별 분석>은, 강원도가 예비후보자 426명 중 208명이 전과경력자로 48.8%를 차지했고, 평균 전과건수는 1.94건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남 지역 예비후보자들로 608명 중 287명이 전과경력자로 47.2%(평균 전과건수 1.93건)를 차지했고, 경북(46.2%), 전남(45.9%), 전북(43.0%), 울산(42.8), 인천(41.7%)순으로 나타났다. 전과경력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예비후보자 245명 중 전과경력자가 71명으로 29.0%를 차지했고, 평균 전과건수도 1.69건으로 나타났다. 20%대는 대구가 유일하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30.2%를 보였으며, 평균 전과건수는 1.15건으로 가장 낮았다. 부산광역시 30.7%(평균 전과건수 1.74%), 대전광역시가 31.0%(평균 전과건수 1.86건)로 뒤를 이었다.
  - <정당별 분석>은, 원내정당 대부분이 예비후보자 중 40% 정도가 전과경력자였다. 원내정당 중 민주평화당은 42.7%의 예비후보자들이 전과경력자로 가장 높았고, 평균 전과건수도 2.05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7.9%가 전과경력자고 평균 1.62건의 전과건수를 가지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40.3%의 예비후보자가 전과경력자고, 평균 1.73건의 전과건수를 가지고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39.4%(평균 전과건수 1.87건), 정의당은 42.1%(평균 전과건수 1.90건)로 나타났다.
4. 총 4,753건의 전과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총 1,362건으로 전체 전과기록의 28.7%를 차지했다.
  - 도로교통법·교통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경우, 42.9%가 차량운행과 관련된 전과기록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과기록 제출서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신호위반, 차선위반과 같은 도로법규 위반보다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이 464건으로 9.8%를 차지해 뒤를 이었지만, 이 중 일부는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폭행·상해·추행 등의 전과 기록은 전체 범죄의 8.8%(417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뇌물수수 전과 기록은 4.8%(226건), 사기·절도·공갈·횡령·간음·협박 등 파렴치 범죄도 4.9%(234건)로 나타났다.
5. 예비후보 등록자 중 전과기록 10건 이상은 총 10명으로 기초의원 후보가 8명, 기초단체장 후보가 2명이었고, 이중 1명을 제외한 9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가' 후보자가 전과기록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강원 삼척시 기초단체장 '마' 후보자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선거 후보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A' 예비후보자, 광주광역시 'B' 예비후보자가 각각 4건, 경상북도 도의원 'C' 예비후보자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6. 각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경선방식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후보공천에 나서고 있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유권자가 요구하는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된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전과기록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정치인을 공천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여기는 사회분위기와 달리, 주요 정당들의 공천기준인 음주운전 2회 이상 등은 너무 관대하다. 정당들은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공천과정과 부적절한 후보자의 공천이 이루어졌을 때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7. 경실련은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배제기준’을 제시해 지방선거 공천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 II.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 1. 취 지

- 지방선거 공천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 서약, 각종 비리 만연 등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역기능이 너무도 큼.
-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정치인의 공천이 필요함. 아울러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를 통해 지방의 정치 및 행정을 중앙의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할 것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지역정당이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
- 다양한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들이 출마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부적합한 인물을 공천하지 않는 배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함.

## 2. 공천배제 기준 제시

구분	내용	공천배제 기준
강력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약취유인, 치사, 방화, 뺑소니 등	예외 없이 공천배제
부정부패 (세금 탈루)	뇌물, 조세범죄,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횡령, 배임, 사·공문서 위조, 입찰, 공사수주 등	예외 없이 공천배제
선거범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예외없이 공천배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예외 없이 공천배제
불법재산 증식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불법적 주식·금융거래	예외없이 공천배제
음주운전	음주운전	예외없이 공천배제
병역비리	병역법 위반, 병역회피 목적 외국국적 취득 등	예외없이 공천배제
연구부정 행위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예외없이 공천배제
파렴치범죄	사기, 공갈, 폭행, 무고,	예외없이 공천배제
민생범죄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예외없이 공천배제

- 생계형 범죄의 경우 소명기회 부여
-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자 제외
- 재판중인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 적용(과중한 범죄 예외)

## 3. 후보자 검증 강화 : 주민후보검증제 실시

- ‘주민후보검증제’는 지역주민이 지금까지의 단순한 투표행위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검증문제와 책임성 문제의 주체가 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지역경실련을 중심으로 일반주민과 정당대표, 전문가, 지역언론 등이 참여하는 「주민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 후보의 공천배제 기준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검증을 마친 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를 공개

- 주민검증 과정을 거쳐 선출된 지역정치인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행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주민에 의한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임.
- 금권선거 방지 및 선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영리단체와 공공단체는 후보자 검증 및 공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는 공천비리 뿐만 아니라 현장의 주민생활보다 중앙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그대로 옮겨놓은 정쟁의 장으로 왜곡시켜 풀뿌리 자치를 실종시키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기초단위의 동네자치로서 주민공동체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지방자치와 같이 정책적인 경쟁, 국가정책 및 중앙정치와의 연계성 보다는 주민자율의 풀뿌리 자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프로그램 :
  - 중앙 : 각 정당 당론 채택 촉구
  - 지역 : 성명발표 및 지역주민 홍보 활동  
각 지역 및 전국단위 캠페인 및 촉구대회

## [자료 4] 발족 기자회견문

##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경실련의 입장

지방선거가 7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정당들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경선 방식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후보공천과 세 확산에 나섰다. 하지만 중앙정당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은 외면당하고 있다. 전략 부재는 사실상 지방선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는 또다시 지역기반 특정정당의 기득권 누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과 중앙정치세력이 지방선거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일부 정당에서는 ‘사천(私薦)’, ‘불공정 결정’ 등 공천문제를 제기하며, 탈당 후 출마를 선언하는 등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혼탁해지고 있다. 정당들은 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공천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다. 정당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되기 보다는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후보적격성을 정당공천에 상관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투표해야 한다.

일부 후보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금전 및 향응제공, 여론조사 왜곡 등 불법·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 정치인들은 지역주민들의 복지, 일자리 마련 등 지역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불법행위들이 만연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와 똑같이 불신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 스스로 올바른 선택에 나서야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경실련은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장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동참과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방선거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일자리·주거안정 등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민생이 우선이 되는 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분석과 공천배제기준을 제시해 지방선거 공천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의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공천과 관련한 각종 부정부패·비리를 감시하고, 깨끗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다.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여 지역주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왜곡된 정치구조를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실련은 6·13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당, 후보자, 유권자, 언론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중앙정당에 대한 요구

- 중앙정당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로 변질시키지 말라.
- 중앙정당은 공천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실천하라.
- 중앙정당은 정당공천 이후 일어나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주민 앞에 밝혀라.

### 2. 유권자에 대한 요구

- 유권자는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유권자는 지역감정, 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표를 뽑아야 한다.
- 유권자는 포퓰리즘, 장밋빛 공약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 유권자는 후보자의 인물과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유권자 혁명에 동참해야 한다.

### 3. 후보자에 대한 요구

- 후보자는 중앙논리를 배제하고 지방의 논리로 지방선거에 참여하라.
- 후보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공정한 경쟁을 하라.
- 후보자는 지방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후보자는 지방분권과 지방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동참하라.

### 4. 언론에 대한 요구

- 언론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구도로 왜곡시키는 보도를 중단하라.
- 언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라.
- 언론은 지방선거를 정당선거로 변질시키는 보도를 중단하라.
- 언론은 상호공격과 소모적인 정쟁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18년 4월 5일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